

상식의 서울시의회,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대법 판결 승소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에는 폐교 등 유류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조합이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와 조합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23년 5월 심미경 의원(국민의 힘, 동대문2선거구)이 대표 발의하여 그 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

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류 공유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에는 30~10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 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 약 300㎡)로 사용 중이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보증금 3억2천만 원에 용산구 모 빌딩을 임차(전용 약 120㎡)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11개 노조 사무실을 위해 보증금으로 세금 35억 원과 월세로 1,400만 원을 쓰고 있었다.

서울시의회의 서울 시내에서도 폐교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활용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도한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낭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그해 7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재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하여 만든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기본인권이자 공교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기초학력보장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서울시의회와 조례안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청 고유업무가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라는 궤변으로 의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가 25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특혜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성 기자

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목)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임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

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권리(단체교섭권)를 제한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2개월여 간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등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된 해당 소송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과 쟁점 검토를 추진해왔다.

특히, 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3월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서울교육청의 과도한 노조사무실 임차비용 편성을 지적한 이후 같은해 11월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동일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서울교육청의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정 당시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던 사무실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만큼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장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실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연구 최종보고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

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통합적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 김포3)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정책의 이정표

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AIP 정책이 도민의 삶에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한 정책 권고에 그치지 말고, 시·군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IP 조례를 제정하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기간 3개월로 2026년 1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오산시의회, 임시회 앞두고 집행부와 주요 현안 공유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한 자리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299회 임시회 운

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도시공사 출범 이후 주요성과 및 사업 추진 현황,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현황, 2027~2028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상복 의장은 간담회에서 “교통, 주거, 육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세밀하게 살펴 시민들이 정책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대전 중구의회, 병오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



대전 중구의회는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11건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월 15일 제271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3

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진)는 1월 8일 중구청 평생학습관 및 전산교육장 등 외부청사 이전 예정지인 신화동 나라키움 신화동 빌딩을 현장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외부청사 이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무실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조성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복 기자

윤종영 의원, 개 식용 종식 대비 전업 지원 현황 살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폐업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과와 식품안전과로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업 지원이 간판·메뉴판 교체 등 시설·물품 교체 비용에 한정돼 있어, 실제 생

계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과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공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관련 예산은 총 6천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소 지원이 4천2백55만 원, 즉석판매제조·공업소 지원이 1천7백55만 원이다. 윤 의원은 “법에 따라 2027년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소가 영영 종료 시점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는 현행 전업 지원이 업종 전환에 따른 실제 비용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